

문화전당, 콘텐츠 확충 안되면 반쪽개관 남해안철도, 설계후 8년간 착공도 못해

막은 국회 예산전쟁... 꼭 확보해야 할 광주·전남 내년 국고지원 사업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한 광주·전남에 대한 예산 확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최근 국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의 광주·전남 예산 소외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예산 평균액 대비는 2570억원, 평균 반영률은 70%를 기록했지만, 광주는 23%인 865억원에 그쳤다. 전남은 더욱 심각해 10%인 837억원이 겨우 반영됐다. 반면 대구는 89%인 4294억원이나 반영돼 있다.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이미 확보한 정부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된 예산은 최대한 추가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문화전당 사업비 확보 '발등의 불' = 광주시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진입로 개설, 숙박시설 확충 예산 등이 단 한순간 반영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반쪽 개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문화전당 준공을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법적 의무사항인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정부안에 사업비 193억원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국회 계류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한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증액, 문화전당 주변 문화 민박촌·문화방 조성비 등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을 위한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 설계·기술 개발비(632억원)의 반영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또한 정부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해 놓고도 용역비마저 미반영한 3D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계 용역비(20억원)의 반영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문화전당,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삼각벨트를 구축해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을

광주 '車 100만대 기지' 반영 총력

전남 10개 주요 사업 대부분 빠져

이걸 계획이었지만, 설계 용역비마저 미반영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년 앞으로 다가온 2019년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준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전남도, 남해안철도 건설 이전에는 꼭=총사업비 1조3083억원의 남해안철도(보성~목포)는 지난해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제외되는 비운을 겪었다. 시급한 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당과의 조율과정에서 밀려나 설계까지 해놓고 8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못한 것이다. 전남도는 내년 사업비 150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6일 오전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지방 발전을 위한 중앙당의 역할을 주문하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 지사가 국고 지원을 건의한 전남도의 지역 현안사업은 호남고속도로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통합의학센터 건립 등 14건이다.

내년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총사업비 400억원)에 필요한 200억원,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350억원) 50억원 등 10개 주요 사업이 정부안에 미반영됐고, 전남의 차세대산업인 튜닝산업과 관련한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연구개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사업비가 불과 104억원, 44억원만이 반영돼 각각 154억원과 50억원의 추가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정치-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 광주·전남 2015년도 주요 국비 반영·증액 요구사업 (단위:억원)

□ 광주시				□ 전남도			
사업명	사업비	요구액	반영액	사업명	사업비	요구액	반영액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8,347	50	-	남해안 철도 (보성~목포) 건설	13,083	1,500	-
초경량 고강성차체 사시부품기술개발	440	70	15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400	200	-
로봇산업 융합핵심 개발 및 상용화	280	48	27	비파괴 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	350	50	-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250	6	4	국립 남대산림 치유단지 조성	1,500	20	-
3D콘텐츠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1,175	20	-	복합해안센터 건립	400	2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 민박촌·문화방조성	293	17	-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786	258	104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1,149	18	-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	1,765	90	13.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진입로개설	193	193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센터 건립	150	75	5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	440	60	20	고부가 식품소재 가공지원센터 건립	300	75	45
한국전지역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405	10	7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8,100	217	-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 콘텐츠 개발	2,500	680	453	기성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1,500	30	-



세월호법·민생법안·담뱃세 등 진통 예고

여야 오늘부터 입법·예산안 심사

여야가 27일 종합합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입법을 놓고 치열한 전투에 들어갈 태세여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욱이 기재위 등 일부 상임위는 법안·예산안을 집중 심의할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비교적 조용했던 국감과 달리 28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어느 해 못지않은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소규모 주택임대주택법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촉진과 이익환수방지법 등 무려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된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곳곳에 걸림돌이 있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는 원년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할 게 뻔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기로 해 합의가 쉽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 교육위원장 “누리·돌봄교실 예산 배정 거부”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3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 사업이며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

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장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201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과 면담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최권일기자 cki@

朴대통령 29일 국회 시정연설 후 여야 지도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별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별도 만남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후 첫 정기국회 시정

연설을 계기로 지난해 9월에도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지난 7월10일 청와대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주요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심사기일 이내 처리해 줄것도 주문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이트진로

hite PALE LAGER

DRINKABILITY EXTRA

Bottom FERMENTATION

ICE POINT FILTRATION SYSTEM

SINCE 1933

하이트

Best Quality Guaranteed

hite PALE LAGER Bottom FERMENTATION SINCE 1933 ICE POINT FILTRATION SYSTEM Best Quality Guaranteed

함께 할때 hite